

반 부 패 개 혁 으 로 청 럽 한 국 실 현

# 국민권익

2018 WINTER  
Vol.59  
ACRC QUARTERLY

## cover story



### 시 계

2019 기해년의 밝은 일출처럼  
희망과 신뢰가 반짝반짝 빛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뿌리내리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편안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목 차

# 국민 권익



발행일 2018년 12월 18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박은정  
편집인 한삼석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77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 031-247-5141



## Cover story 시계

국민이 중심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 Special Theme

- 04 포커스 1**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대한민국'  
〈2018 반부패 주간〉 청렴문화행사 개최
- 10 포커스 2**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실시
- 12 ACRC 뉴스**



## 청렴, 하다

- 14 시대인터뷰**  
[청렴한 삶]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새해 목표를 듣다
- 18 글로벌 리포트**  
촉촉한 시스템 · 엄격한 법  
집행만이 반부패 지름길
- 22 브레이브 하트**  
돈키호테의 뜨거운 심장으로  
대한민국 속으로 직진하다
- 26 정책공감**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 및 해단식 개최



## 공감, 나누다

- 28 ACRC가 간다**  
고속도로 소음 및 분진 피해로  
고통 호소하는 주민들을 찾아가다
- 32 카드로 보는 국민권익**  
제도개선 · 고충민원
- 36 부서탐방**  
전국 구석구석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드립니다!
- 40 기업신문고**  
기업고충민원 해결에 최적화된  
전사적 기업응부즈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오감, 열다

- 42 청렴한 여행**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을  
가치와 정신  
경기도의 청백리를 만나다
- 48 건강보감**  
천바람 생생 불면 떨어지는 면역력  
대상포진 주의하세요~
- 50 시크릿 팁**  
궁금했지만 잘 몰랐던  
전기차, 어떤 혜택이 있을까?
- 52 독자마당**



##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대한민국’ <2018 반부패 주간> 청렴문화행사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12월 3일부터 2주간 다양한 청렴문화행사 성황리에 개최



다양한 기회로 신고자를 만나며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고 반부패·청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2주 동안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린 <2018 반부패 주간> 행사들,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 <2018 반부패 주간> 기념식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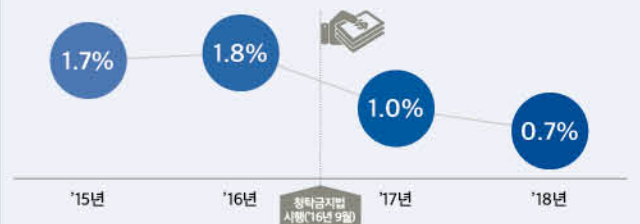
12월 5일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내빈과 일반국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반부패 주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도 개선기관 우수사례가 공개됐으며,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다양한 기회로 신고자를 만나며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며 “사회적 부조리를 신고한 분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공익 신고의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단위: 점)



### <외부청렴도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2

12월 6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에 관한 경험 등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고충민원 현장해결  
'이동신문고'



## 반부패 주간 '특별이동신문고' 운영

#3

<2018 반부패 주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는 반부패 주간 행사 참석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공약·부패신고 및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 특별이동신문고! 반부패 주간 이후에도 이동신문고는 2019년에도 전국 각지로 달려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청렴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4

...

12월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2018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기, 단편소설, 독후감 및 단편영화, 강연 등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은 59편의 분야별 수상자들을 축하했는데요. 올해에도 청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망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수상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정된 모든 작품들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http://eduacrc.go.kr>) 및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캠페인, 청렴특강, 공연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반부패 주간>을 맞아 서울 등 전국 10여개 주요도시에서 반부패·청렴정책 홍보물을 전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청렴특강, 어린이인형극, 창작연극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대한민국',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실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채용비리 실태조사 실시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한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6일부터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까지 실시되며 같은 기간 동안 집중신고기간도 운영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및 채용과정 전수조사 실시

●●●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2일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 6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며, 신고대상은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번호로 상담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8년 11월 6일 ~ 2019년 1월 31일

대상기관 1,453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338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268개(국민권익위)

점검대상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신고기간 2018년 11월 6일 ~ 2019년 1월 31일

대상기관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공기관(847개), 기타 공직유관단체(1,141개)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인사·채용 관련 비리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ACRC HEADLINE NEWS



## 국민콜 110 상담사 성희롱·욕설 처벌 받는다

앞으로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성희롱·욕설 등을 한 민원인은 형 사고발 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를 보호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민콜110 상담사는 성희롱, 욕설 외에 내용불명, 상습 강요, 반복 억지 민원 등 월평균 2,100여건 이상의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려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7년 9월 11일부터 1년간 상담사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 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악성·강성민원이 하루 평균 7건에서 6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후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새 운영지침은 민원인의 폭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상담사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담사가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업무 담당자를 교체 해줘야 하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치료하는 등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전국 500여 축사악취 민원 반발지역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전국 축사악취 발생 533개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최근 축사악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지역의 김성원 국회의원과 전국 지자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축사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전국 축사악취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습 악취 민원 지역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7년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축사 철거 및 이전 69건, 시설개선 198건, 악취억제제 살포 및 행정지도 460건 등 총 727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회에서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INTER 2018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는 10월 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학계, 시민단체, 신고자, 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오남용을 방지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언론·시민단체를 통한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보·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일자리 지원 등 신고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토론회과정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지났더라도 사정 있었다면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채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채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채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채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청림, 하다  
시대인터뷰

글 김은섭 | 사진 김오늘



## [청림한 삶]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새해 목표를 듣다

‘청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실천들을 뿌리로 자라난다.  
약속과 원칙으로 싹을 틔우고 역지사지로 열매를 맺는다.  
2019년 대한민국에 희망을 뿌리내릴 생각과 이야기들을 만났다.



“기회와 혜택이  
늘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길!  
청림은 언제나  
제 삶의 출발점입니다.”

김상동

애니메이션스쿨  
교수  
(43)

### 청림은 일상이자 일생동안

청림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덕목’이자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가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늘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는 터라 5년마다 한 번씩 학교에서 고사양의 컴퓨터와 책상 등을 새로 제공받고 있는데, 받아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진행하죠. 그 덕에 간혹 저를 만나려는 분들이 제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요(웃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청림은 제 삶의 엄중한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과 원칙을 지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2019년에는 좀 더 유연해진  
원칙주의자로 살겠습니다.”

진혜령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59)

### 약속과 원칙으로 신뢰를

어린 시절에는 사실 ‘청렴’이 너무 거창하게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문화해설사로서 청렴의 상징과도 같은 위인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청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속’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관계에서 약속과 규칙,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뢰를 만드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일을 20년 정도 했었는데, 약속이나 원칙을 안 지키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이 무너지면 소통도 설득도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지요.



저녁마다 일기를 쓰는데 살펴보니 후회와 반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원칙과 약속을 좀 단호하게 주장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원칙주의자로 살 것 같긴 하지만(웃음), 좀 더 유연하게 ‘청렴’을 실천해나가고 싶습니다.



“바른 생각과 태도로  
자신을 살피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타인을 살피어나가는  
기해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장  
(51)

### 正立과 易地思之로 새해를

평소 직원들과 소통할 때 ‘청렴’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는 ‘정립(正立)’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다’는 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로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둘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삶을 잃지 않는다면 상호보완의 관계를 넘어 다함께 보다 청렴한 사회를 실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렴(淸廉)은 한자 뜻 그대로 자신과 주변을 맑게 살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지, 나아가 사회적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살피어나가는 것이 2019년 한해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촘촘한 시스템 엄격한 법

## 집행만이 반부패 지름길



# CANADA

지난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가장 해결하기 원하는 주제는 '부정부패 척결'(25.0%)이었다. 지난 대선 전후에도, 10년 전에도 '부정부패는 없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50위권을 맴돌고 있는 한국의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경제규모는 10위권이지만 부패 정도는 한참 밀돌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두 국가는 부패 척결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끊임없이 정비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부패인식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투명하고 촘촘한 시스템이

## 캐나다 부패 척결 원동력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만큼이나 캐나다의 부패 수준은 낮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캐나다는 10위권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캐나다의 부패방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과 캐나다 국립경찰이다. 이 기구들은 법에 따라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

2013년에는 '캐나다 외국공무원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면서 RCMP 산하 '국무과(National Division)'를 개설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엔지니어링 회사의 국제 뇌물수수 스캔들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무과는 연방정부와 외국에서의 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받았다.

캐나다 부패방지의 노력은 촘촘히 구성된 시스템에 잘 나와 있다. 캐나다는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 부문으로 나눠 공직자 범위를 정하고 부패 행위 유형과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다. 인상적인 점은 각 조직에 적용되는 법률 내에서 자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하도록 해 이중 윤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회는 '연방의회법' 상에 '상·하원에 대한 윤리 및 이해충돌강령'을, 정부는 '이해충돌법' 상에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강령'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문 전체 공직자에게는 '공직자 신고 보호법'과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아울러 로비를 허용하는 캐나다는 '로비법'과 '로비스트 행동강령'이 갖춰져 있다.

캐나다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는 위원회가 조직됐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의 활동 모습. (사진출처-RCMP 공식 트위터)

신고보호법'에는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특히 캐나다는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 신고 보호법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된 사법 체계 속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함께 부패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2010년 독일의 최연소(51세) 대통령으로 임명된 크리스티안 볼프는 19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2008년 주지사 시절 새집을 짓기 위해 기업인 출신 지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1%p 싼 연4% 조건으로 50만 유로(약 6억 원)를 빌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볼프의 부인은 은행 용자로 자동

차를 사면서 당초 1.5% 금리보다 낮은 1.2%를 적용받은 점도 지탄의 대상이 됐다.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볼프는 무죄를 받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처럼 독일은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반부패 정책인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재단, 주식회사 등 민간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익 수수죄'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5유로(약 3만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실정을 고려해 선물 수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선물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방 내무부는 25유로, 연방 법무부는 5유로(약 6400원) 이하의 선물만 각각 허용한다. 대가성 뇌물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또한 독일 공무원들은 반드시 '공직자 부패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소한 사례까지 부패 행위 여부를 숙지시키며 행동 규범을 강제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에서도 반부패 활동이 활발하다. 이미 많은 대학



2012년 2월, 자진 사임을 발표하는 크리스티안 볼프 독일 전 대통령



2018년 '경제 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 연례회의 모습. (사진출처- 경제 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 홈페이지)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연방의원 전경

에서 경제윤리학과를 신설한 상태다. 특히 콘스탄츠 대학에서는 '경제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Deutsche Netzwerkwirtschaftsethik)'와 '경제윤리센터(Zentrum fuer Wirtschaftsethik)'를 세워 독일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청렴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 청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만 있을 뿐

로버트 클리트가드(Robert Klitgaard) 클레이몬트 대학원 교수가 부패를 놓고 말한 격언이 있다.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격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패는 말 그대로 '공멸'을 부르는 시작점이다.

"안 씹은 곳이 없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틀린 말도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청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만 있을 뿐이다. 앞서 설명한 독일과 캐나다, 두 국가 역시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부패가 발생한 이후다. 두 청렴선진국은 '부패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법을 제정비하고 반면교사 삼아 더 깨끗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들리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비리 사건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청렴이 사회와 국가 청렴의 디딤돌이자 주춧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돈키호테의 뜨거운 심장으로



### 대한민국

### 속으로

그는 직진한다. 뜨거운 심장과 살아 숨 쉬는 눈빛으로  
대한민국의 모순을 직시한다.  
그리고 이 땅의 누군가는 거꾸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쉬지 않고  
희망을 쫓아내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조차 묘한 연대의식을 느끼게 하는 힘은,  
그렇게 담금질된다.

2018년 12월 11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2019년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  
다. 사립유치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된 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유아교육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운 이후 장장 5년 동안 발이 묶여있던  
사안이 일사천리로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지난 9월 17일,  
CBS에 소속된 한 기자의 보도가 시발점이었다.

### 사립유치원, 비리 대한민국의 실체를 폭로하다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부 방침은 다행스러운 일이  
지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은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미술고 수업료 불법과다징수’ 문제를 공익제보  
한 정미현 교사는 직위해제와 파면이 반복되고 있고요.”  
9월 17일,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라는 헤드  
라인을 시작으로 50회가 넘는 연속기획 보도로 사립유치원 문  
제를 파헤친 김영태 기자. 그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한  
다. 사립유치원들의 힘은 정부당국의 방치와 정치권의 비호  
아래 너무 비대해졌으며, 그들의 부정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고, 비리에  
연루된 정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제가 기자생활을 시작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  
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취재하면서 느  
낀 게 있는데 기득권의 주장이 공공성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먹혀드는 현실이,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상식과 양식이 통  
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낳은 괴물 같은 모습… 그래서

### 직진하다



Tae

김영태  
CBS 사회부  
선임기자 (52)

Kim Yeong



일등주의, 입시위주가 아닌, 인성과 창의가 근간이 되는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 약자의 이야기를

#### 가슴으로 듣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가 선택한 첫 직장에서 그 혼란 이동 한 번 없이 30년 동안을 기자로 살았다. 그리고 한결같이 법과 제도의 모순, 관행화된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파헤치고, 비정규직, 공익제보자, 기간제 강사 등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몰두했다.

2018년 1월 교육부 출입기자가 되면서부터는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문제에 집중했다.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와의 인연

도 그때 시작됐다. 당시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불법과다징수를 공익제보한 정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학교측의 보복성 조치로 이미 파면을 당한 뒤였다. “학교설립자와 그 일가족이 판치는 족벌사학만 존재할 뿐 학교구성원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비리사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성질서 역시 강고했습니다. 정 교사님을 결국 파멸 수준까지 몰고 가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당사자만큼 절박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겠지요. 아, 국가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키는 비리사학의 실체를 집요하게 보도했고, ‘수업료자율학교 지정 취소, 복직판정 교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 강제, 감사원 감사 실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 나는 직진한다

#### 고로 존재한다

김영태 기자는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로 불린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한물 간’ 기사도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풍차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돈키호테처럼,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구태의연한 믿음만으로 오직 ‘기자의 道’를 지키기 위해 목표로 직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실 전 온건한 사람입니다(웃음). 단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탄압,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눈에 보이니 발끈하는 것뿐이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권을 옥죄고 있는데 그걸 용인할 수는 없죠.”

그는 ‘집중취재 보도’ 분야에서 단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집요함으로 대한민국에 산재해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왔다. 서울미술고 관련 기사는 21회에 걸쳐 보도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립유치원 관련 보도는 지금까지 50회를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발휘된 특유의 추진력과 독심은 그를

적으로 규정했던 사람들조차 조력자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광주지방법원 급행료 비리 폭로, 경찰 학원사찰, 대전 시민천문대 천체망원경 특허 입찰 보도 등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세 차례 수상한 바 있는 그는 올해 12월에는 호루라기재단이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이에게 수여하는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리 사회가 ‘수치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주의, 성과주의, 돈이 아니라 사람, 관계, 문화가 중요한 사회,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아울러 법원은 정의를 구현하는 판결을 하고, 국회는 민심을 반영하는 입법을 하고, 언론 역시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모두 힘을 합쳐 의제를 설정하고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기자는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로 불린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한물 간’ 기사도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풍차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돈키호테처럼,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구태의연한 믿음만으로 오직 ‘기자의 道’를 지키기 위해 목표로 직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 Don Quixote



##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 및 해단식 개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세부과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다양한 의견 개진



2018년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구성



**성별**  
남성 30명,  
여성 20명  
(총 50명, 지역단위로  
10개 팀 구성)



**연령**  
20대 25명,  
30대 1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3명



**직업**  
대학(원)생 26명,  
주부 2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전문직·회사원·프리랜서 등 17명



**지역**  
서울 19명,  
경기 인천 11명,  
충청 대전 세종 10명,  
경상 부산 5명, 전라 5명

### 해단식에서 우수팀 포상 및 활동 공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10일 합정역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30명의 국민모니터단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장, 사무처장, 기조실장, 대변인, 민간협력 담당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국민 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방향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세부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국민모니터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수팀과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한 포상과 함께 2018년 주요 활동을 공유했다.

### 모니터링 및 제안 등 활발한 활약 펼쳐



한 달여의 심사를 거쳐 약 7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50명의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그동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워크숍 등의 일정을 함께 했으며 각 정부 부처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왔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를 국민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해온 국민모니터단은 이날 행사에서 악의적·지능적 탈세 근절, 사학비리 근절,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같이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해석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처럼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도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유와 금액을 공개하도록 해 편법적인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부패경고 그림을 적



용한 ‘클린카드’를 도입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국민권익위,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터



이날 행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청렴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국민모니터단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결과물을 비롯해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느낀 참여 열기가 놀라웠다”며 “모니터단 활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모니터링 적합과제 선정 및 희망과제 자율 선택, 모니터링 기법 교육 및 체크리스트 제공, 1기 모니터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 고속도로 소음 및 분진 피해로 고통 호소하는 주민들을 찾아가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1월 16일 광주광역시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 개최

강진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제255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학교 및 마을이 소음, 분진 및 교통안전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이 2018년 3월 6일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1월 16일 최종 조정회의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원구간을 터널과  
교량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2,704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 소음 및 분진 발생시키는 고속국도 공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국도 제255호선(강진~광주)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송학초교 및 주변 마을과 너무 가깝게 설계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진행되면 마을 앞에 약 10m 높이로 흙막이가 쌓여 조망권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어린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땅깁기구간 등에 덮개방음터널과 저소음 포장, 흙쌓기구간 교량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민원구간을 터널과 교량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 2,704명이 올해 3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조정회의 열고 광주 현장에서 조정안 확정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6일 오후 대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의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학교 주변 덮개방음터널, 저소음포장 등 최종 설치 합의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①송학초교 뒤편 땅깍기구간은 길이 30m의 덮개방음터널 설치, ②흙쌓기구간에는 높이 3m, 길이 235m의 투명꺾음형 방음벽 및 수목 식재, ③세동마을과 동하마을을 연결하는 사유지 농로에는 폭 3m의 포장을 시행하되,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옆으로 연결도로 설치, ④동하마을 구간은 높이 3~5m, 길이 260m의 투명꺾음형 방음벽 설치, ⑤흙쌓기구간에 계획된 통로암거는 4.5m이던 기존 폭을 8m로 확장 포장하되 법면에는 수목 식재, ⑥백마제는 주민과 협의하여 축소 이전하되, 관정을 추가 설치하고 뒤편 등산로에는 폭 6m의 횡단육교 설치, ⑦기존 15m이던 사동마을 진입부 서창1교 교량을 30m로 추가 연장하고 고속도로 인접 마을 진입로는 직선화하되, 하부에 부체도로 설치, ⑧용두동 구간은 소음저감을 위해 높이 2m, 길이 90m로 방음벽 설치, ⑨마지막으로 서창동 구간은 저소음포장을 실시하되, 과속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될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고속국도 신설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해왔던 교통안전시설 등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향후에도 각종 고충민원 적극 해결해나갈 것

또한 광주광역시, 백마교차로에서 사동마을로 이어지는 마을 진입로를 왕복2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고속국도 신설로 인해 주민들이 우려해왔던 교통안전시설 등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일시                 | 내용                             |
|--------------------|--------------------------------|
| 2018. 3. 8         | 집단 고충민원 접수(마을주민 2,704명)        |
| 2018. 3. 12        | 설명자료 요청                        |
| 2018. 3. 23        | 설명자료 접수(도로공사)                  |
| 2018. 3. 23        | 설명자료 접수(광주광역시)                 |
| 2018. 4. 12        | 1차 실지조사                        |
| 2018. 4. 30        | 신청인 보완자료 요청(조정안 주민동의서)         |
| 2018. 6. 27        | 신청인 보완자료 요청(조정안 주민동의서)         |
| 2018. 7. 5         | 2차 실지조사                        |
| 2018. 7. 24        | 신청인 보완자료 요청(조정안 주민동의서)         |
| 2018. 9. 2         | 신청인 대표자 변경서 제출                 |
| 2018. 9. 23~10. 30 | 현장조정관련 전화 등 협의                 |
| 2018. 10. 31       | 신청인 보완자료 요청(주민동의서, 추가 대표자 변경서) |
| 2018. 11. 7        | 조정안 확정                         |
| 2018. 11. 16       | 조정회의 개최 및 최종합의안 도출             |

## 턱없이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제도개선

CASE  
#1

#### 대입 전형료, 너무 비싸요!

대학별 수시모집 비중이 70%로 확대되면서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

#### 대입 전형료, 무엇이 문제인가?

##### 대입 전형료 및 부대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가중

수시 전형료는 통상 10만 원 선이고, 학생마다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시전형료는 수능을 100% 반영하는 일반전형의 경우 보통 4만 원이지만, 실기를 보는 예체능 계열의 경우 10만 원선까지 올라간다. 결국 수시 6번과 정시 가, 나, 다군 3회를 모두 지원한 학생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전형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서울소재 대학에 응시한 지방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1인 평균 13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부모가 동행할 경우 200만 원 선까지 비용이 늘어난다.

##### 대입 전형료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책정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기술사 등 기술자격증 시험의 전형료가 1~2만 원 이내임을 감안할 때 그 몇 배에 달하는 대입 전형료의 경우 지난 학년도 전형료 수입, 응시율 등 연도별 추세치를 분석하여 시행원가를 산정 후 책정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통해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 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 전형료의 부절절한 집행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절절한 집행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경비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 대입전형료공정관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각 대학은 대입전형료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구성이 소속대학의 교수 등 내부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 의견수렴이 미흡하였다.



2

입시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비싼 대입 전형료까지 더해지니 학부모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대학들에게 향후에는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 전형료 책정 및 심의절차 투명성 제고

###### ①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 인원 응시자, 수입금, 결산자료 등 전형 유형별 표준 시행원가 산출 → 「대입전형지출항목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 원가계산 연구용역 등 실시

###### ② 대학별 전형료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서 공개

- 전형료 책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혹 방지 등을 위해 전형료 편성 예산서 공개(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 공개) → 「고등교육법」,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별법」 개정

###### ③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 내실화

- 위원회 구성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 소속대학 교직원 외 외부위원 참여 확대(고교 진학부장(전국 단위 교사 Pool), 학부모 대표, 회계전문가 등 외부위원 30% 이상 참여)
- 전형료 책정 및 대입 전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 강화 → 「대학 학칙」 개정



##### 전형료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 ① 인건비성 수당, 여비, 식비 지급 기준 명확화

- 전형료 전체 수입액에 대한 일정범위(15~40% 이내) 기준 폐지, 입학전형 실경비 위주로 지출(업무별 가이드라인 명시)
- 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분화하여 결산 시 항목별 공시 등

###### ② 대학 자체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지출범위 합리적 설정

- 외부 임차 시설은 제외(공공요금 15% 기준 폐지 등)

###### ③ 홍보(광고/홍보/설명회 행사 등) 용어 정의 및 지출범위 명확화

- 홍보성 모집요강, 자료 인쇄비는 홍보비 포함, 학교홍보 사업과 수험생 입학요강 시험일정 안내는 구분 필요
- 홍보성 경비 용어 정의 및 지출범위 명확화, 광고성 홍보경비 지출 초과기준 강화(10% 이내로 축소) 등

###### ④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 중심의 대학입시 홍보 및 설명회 강화

- 대교협(상담프로그램), 교육부(나이스 시스템), 지자체 합동 설명회 개최
- 대학 입시 홍보 및 설명회 권역별 공동 경비 부담 및 참석기관, 대학별 참석 비중 고려해 경비 부담 적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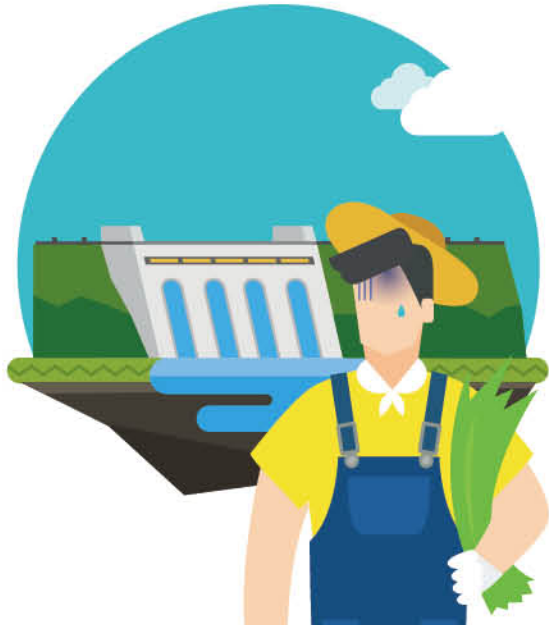
문의 국민콜 110

##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관련 4개 기관의 고충을 중재하다

고충민원

1

CASE  
#2



### 섬진강댐 재개발로 농작물 경작이 어려워요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지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섬진강댐 재개발 건설사업(이하 민원사업)' 지구 내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폐천부지(이하 민원토지)에 임실군수가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특용작물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민원토지가 민원사업 계획 홍수위(홍수 시 유량을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수위)보다 낮아 수몰될 위험이 크므로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에 계획 홍수위 수준으로 흙을 쌓아 생계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2

### 피신청인들의 입장

#### 피신청인 1. 한국수자원공사

이 민원토지에 흙을 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미 부담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할 수 없다.

#### 피신청인 2. 임실군수

신청인은 고령의 저소득층으로 생계대책 수립 차원에서 이 민원토지에 흙을 쌓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므로 이 민원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

#### 피신청인 3. 전라북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토지를 이 민원사업에서 제외하여 임실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 피신청인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토지를 이 민원사업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이 민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3

### 국민권익위, 다각도로 중재 후 최종 조정 및 합의안 도출

본 조정내용은 이 민원토지를 「폐천부지 양여조건(2000. 1. 22)」에 따른 이주대책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일환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라북도지사가 이 민원토지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요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다.

나. 임실군수는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에서 원활한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침수피해 방지(흙 쌓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다.

다. 전라북도지사는 임실군수가 이 민원토지에 대한 매각 요청 시, 임실군수에게 매각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한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마. 임실군수는 신청인에게 생계대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이 민원토지 내에서의 면적 산정 등에 대하여는 향후 신청인의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바. 전라북도지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폐천부지 양여조건」에 의거 이주대책 및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정산한다.

사.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은 조정서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의 국민콜 110



## 전국 구석구석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탁상행정'에 고개를 내저을 때, 이동신문고팀은 전국 각지로 달려가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민원인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답답한 심정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일에도 술선수범이지만, 마음 씀씀이마저 최고다!

### 이동신문고팀

“아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 여러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신문고를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민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빠르게 피드백 되는 디지털 전자정부 시대,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에 오랜만에 이장님의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진다. 오매불망 달뜬 마음으로 상담장을 찾아온 어르신이며 주민들을 한결음에 달려와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이다.

### 각계각층의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다

“요즘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시골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도서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건상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가 발생하는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각종 행정분야에 대한 중



왼쪽부터 이종윤 사무관, 정승용 주무관, 권근상 고충처리국장, 정영성 이동신문고팀장

### 이동신문고+협업기관 상담으로 운영성과 상승

이동신문고팀 출범과 함께 타 기관들과의 협업을 점차 늘려가면서 행정분야 고충처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충을 느끼는 모든 영역에서 종합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상담 때문에 찾아온 민원인이 법률 상담을 하고 무료 진료도 받는 등 이동신문고 한 곳에서 여러 고충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운영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간 평균 11회였던 운영 횟수가 49회로 늘었고 민원상담건수도 308건에서 1,564건으로 상승했다. 2018년 10월 현재까지 운영횟수는 593회, 총 상담건수는 1만8천건을 넘어섰다. 그중 관련기관들과의 중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합의·해결되는 민원만 50%에 육박한다.



“합적인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매월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는 지난 2003년 10월, 충북 청주시에서 ‘전국 순회상담’이라는 명칭으로 ‘민원상담 및 접수’ 위주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2008년 3월에는 업무방식을 상담·접수 위주에서 ‘현장해결’ 중심으로 전환했고, 2009년 1월 ‘이동신문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담팀이 꾸려졌다.

###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협업기관 상담분야>

| 상담기관      | 상담분야                                                                         |
|-----------|------------------------------------------------------------------------------|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행정 전 분야: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으로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분쟁: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무료진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를 추천 받아 무료 한의 진료                                        |



###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중심 행정

“아이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니 고맙구먼.”

“얘기만 들어주셔도 속이 뽕 풀리는 것 같네요.”

이동신문고팀이 지금까지 견재해왔고 앞으로도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팀원들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한 번 출장을 가면 일주일이 걸리는 고생길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솔한 마음들이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시너지를 발휘한다. 연세가 많고 인터넷을 알지 못해 심신이 불편한 분들이 그래서 상담이 끝난 후엔 모두 한 목소리로 ‘다시 와줄 수 없냐’고 손을 붙든다.

정영성 이동신문고팀장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원도 잘 들어드리는 것이 반”이라고 말한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민원인데 차분히 이야기만 들어드려도 속 시원해 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디지털문화가 해소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마주보고 소통하다 보니 민원인의 고충을 좀 더 공감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자연스레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신문고는 올해 11월에 처음으로 상담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대형상담버스를 도입했다. 그동안 마을회관 등 상담장소를 찾는 데도 시간을 들였는데 다행스런 일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상담장을 방문하는 주민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주민밀집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10년이나 묵은 민원을 현장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드림팀. 사명감보다는 보람이 크다고 말하고, 언제 어느 곳이든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찾겠다는 이동신문고팀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MINI INTERVIEW



국민들이 가슴앓이 하시지 않게  
구석구석까지  
더욱 발로 뛰겠습니다!



이동신문고팀 이종윤 사무관

“그동안 주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2월부터 이동신문고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역률한 일을 당했거나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구제절차나 방법을 몰라 가슴앓이를 하던 국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 긍정적인 성격이라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동신문고가 필요한 국민 여러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한 분 한 분  
더 많은 분들 뵈 수 있음  
좋겠습니다



이동신문고팀 정승용 주무관

“이동신문고팀 팀원이 된지 3년이 좀 넘었네요. 거의 100여 군데 지역을 순회한 것 같습니다. 다녀보니까 민원인들이 기본적인 법이나 제도에 잘 모르시고 권익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현장을 찾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골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신 분들을 살피드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이시니까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를 활용해 궁금중이나 고충들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업고충민원 해결에 최적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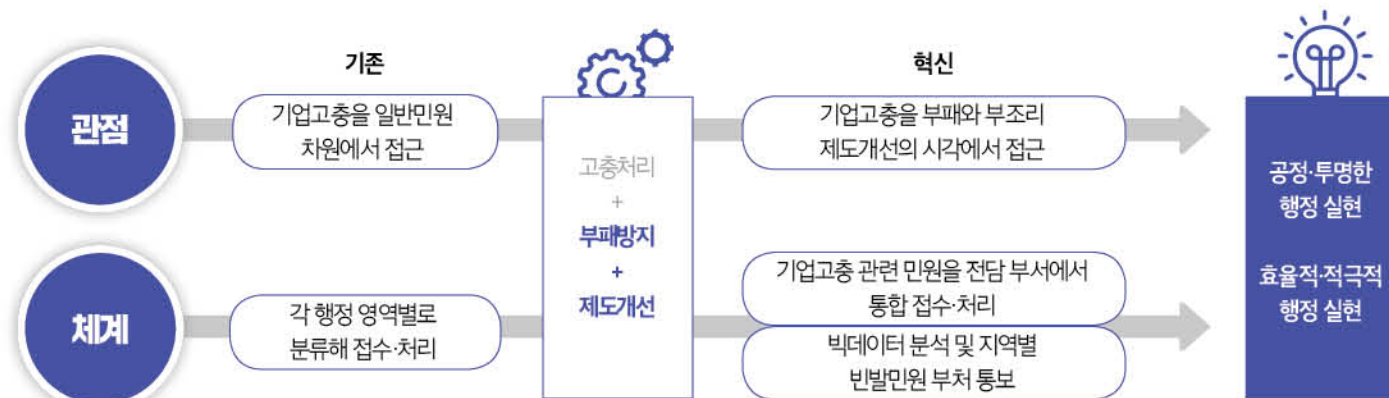
## 전사적(全社的) 기업옴부즈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 등  
권익위 기능과 역량을 결집한  
‘기업고충민원팀’의 지난 1년을 결산하다



### 기업고충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처리하는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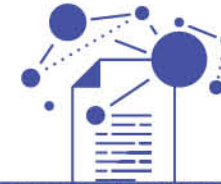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신기업환경 조성’에 전력해야 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힌바 있다. 기업들의 고충은 각종 부패와 부조리, 법령·제도의 미비, 탁상행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능들의 융합·확장을 통한 입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권익위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한 전담조직이 바로 지난 2017년 12월에 신설된 기업고충민원팀이다.



### <기업고충민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세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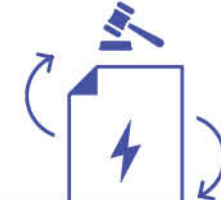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수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 고충민원

- 조정: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계자 간 합의 도출
- 출석조사: 신청인, 관계 기관 전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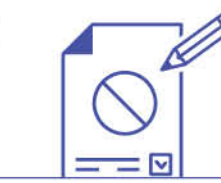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번복이 불가능해 처분 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민원

- 집행정지 권고: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잠정 정지할 것을 권고
- 합의 권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약식 조정



법령·제도 및 처분기관의 관행 등에 대한 시정·개선이 필요한 민원

- 시정권고: 처분에 명백한 위법·부당성이 있을 경우 시정을 권고
- 제도개선 권고: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



### 현장중심, 기업중심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확대

기업고충민원팀은 공장 인허가, 공공계약, 국제·지방세, 갑질·비리 등 기존에 각 조사과에 분산되어 있던 기업민원을 전담해 일괄 처리한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채용, 정책자금, 환경, 수출입 등 기업경영 전반과 관련된 중앙부처·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업지원 기능을 망라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운영해왔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현장상담 및 안내, 고충민원, 제도개선, 정책건의 등으로 구분해 기업고충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올해는 특히 범정부 차원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의 고충도 해결하기 위해 태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회의도 개최하였다.



### ‘신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그리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업고충민원팀은 그간 사업비 1조3천억 규모의 대형 공공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공모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10년간 미해결된 산단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폐업위기의 레저관광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등 부패·부조리에서 비롯된 기업고충을 해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선도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금 지원, 3천5백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비롯해 모 기업의 중국공장 국내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았다. 아울러 국도신설에 따른 공장 대체집입로 개설,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신축 피해 구제 등을 통해 일선행정의 소극·탁상행정을 타파하고 공공분야 전반에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 <기업고충민원 처리 실적(‘18.1월~11월)>

| 구분      | 처리 결과 |       |       |       |       |       |       |       |       |
|---------|-------|-------|-------|-------|-------|-------|-------|-------|-------|
|         | 소개    | 시정 권고 | 의견 표명 | 조정·합의 | 심의 안내 | 기각·각하 | 이송·이첩 | 안내 회신 | 취하·종결 |
| ‘18.11. | 218   | 2     | 4     | 94    | 5     | 23    | 0     | 46    | 44    |

###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실적(‘18.1월~11월)>

| 구분         | 고충민원 | 정책건의 | 제도개선 | 현장상담 | 계   |
|------------|------|------|------|------|-----|
| 1월(경기 수원)  | 7    | 18   |      | 5    | 30  |
| 2월(주한영국상의) |      |      |      | 10   | 10  |
| 3월(전남 영광)  | 1    | 7    | 1    | 6    | 15  |
| 4월(서울 강남)  | 4    | 8    |      | 1    | 13  |
| 5월(전북 전주)  | 4    | 13   | 1    | 6    | 24  |
| 6월(강원 고성)  | 7    | 4    |      |      | 11  |
| 7월(부산 해운대) | 2    | 2    |      | 3    | 7   |
| 8월(전북 익산)  | 2    | 6    | 2    | 5    | 15  |
| 9월(울산)     | 4    | 8    | 3    | 4    | 19  |
| 9월(전남 목포)  | 3    | 23   |      | 3    | 29  |
| 10월(경남 창원) | 5    | 23   | 2    | 1    | 31  |
| 10월(경남 고성) | 3    | 15   | 2    | 3    | 23  |
| 11월(전남 영암) |      | 8    |      | 7    | 15  |
| 11월(전남 해남) |      | 7    |      | 10   | 17  |
| 합계         | 42   | 142  | 11   | 64   | 259 |



##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을 가치와 정신 경기도의 청백리를 만나다

### 경기의 청백리들

경기는 시대의 흐름에 초연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던 청백리의 산실이었다.  
곧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배길에 오르면서도 외려 나라를 걱정했던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덕목'들을 일깨운다.

## 세상과 백성의 나아갈 비를 살핀

## 다산(茶山) 정약용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봉건질서를 타파하고자 노력한 개혁가 정약용(1762~1836)은 출중한 학식과 재능으로 조선 후기 개혁군주였던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정조를 도와 거중기를 제작하고 수원화성을 세우는 데 기여하는 등 발명가로서도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는 1801년 남인을 제거하려는 반대파 노론 세력에 밀려 신유박해에 연루되면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탄압까지도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이던 다산은 그 기간 동안 학문탐구에 전념해 500여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하기에 이른다. 단지 이론에 머물러 있는 쓸모없는 학문을 지양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했던 그는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생 고민했고 이를 책으로 풀어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애민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천연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치료법과 예방법을 제시한 <마과회통>을 비롯해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고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목민심서>,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근본 개혁안을 제시한 <경세유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바르고 신중하게 판결하라는 요지를 담은 <흙흙신서> 등을 통해 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청렴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도록 요구한다. 한 번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볼 일이다.

愛民之本 在於節用 節用之本 在於儉  
儉而後能廉 廉而後能慈 儉者 牧民之首務也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검소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리들에게 청렴과 솔선수범 강조한 목민심서(牧民心書)

다산은 목민관의 첫 번째 임무로 ‘씀씀이를 아끼라’고 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산도 단 두 글자 ‘근검(勤儉)’이었다. 그가 말한 절약은 사유(私有)와 공유(公有)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며, 나아가 ‘청탁이나 뇌물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옳지 않은 길이면 가지 말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라고 강조한다.

## 다산의 마음이 스며있는 생가 여유당(與猶堂)

57세가 되던 해 가을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그가 태어난 생가 여유당에서 이미 이루어진 저술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힘쓰며 자신의 학문과 생애를 정리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이름을 내걸었던 여유당에는 ‘살얼

음이 언 겨울 냇가를 건너듯 사방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동을 함에 있어 주위를 먼저 살피고 신중하라는 뜻이다.

다산이 생전 가장 사랑했던 책은 ‘주역’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적은 <주역사전>이라고 전해진다. 퇴계, 율곡, 성호, 다산 등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들은 모두 주역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그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1804년 최초의 갑자본이 출간된 이후 1808년 최종 무진본이 간행될 때까지 4번의 개고를 거칠 정도로 그는 주역사전의 완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의 저서 여유당 전서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후손들에게도 주역에 밝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만난 것처럼 대하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에게 주역은 백성들을 위한 선의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 일이 과연 하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책이었다. 그 천명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이상사회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쓴 주역사전이 바로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1  
여유당(與猶堂)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정약용이 살던 생가로 1925년 육촌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고증을 거  
쳐 1986년 복원했다. 집 앞으로 내(井)  
가 흐르고 집 뒤로 낮은 언덕이 있는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다산은 이를  
수각(水閣)이라고 표현했다.

2  
다산선생묘  
경기도 기념물 제7호  
백성들에게도 미신을 믿지 말고 자신  
의 운명을 부지런히 개척하라고 당부  
했던 정약용은 자신이 죽으면 지관  
에게 명당을 묻지 말고 집 뒤 동산에  
묘를 쓰라고 유언했다. 여유당 뒤편  
에 정약용과 부인 풍산 홍씨가 합장  
되어 있다.

3  
문도사(文度祠)  
1910년 7월 순종은 사후 75년 만에 정  
약용에게 정현대부 규장각 제학으로  
추증하고 문도공(文度公)이라는 시호  
를 내렸다. 그래서 사당이름이 문도사  
다. 학문에 부지런하고 문기를 좋아함  
을 문(文)이라 하고 마음을 의리로 제  
어한다는 도(度)라는 뜻이다.

바르고 검소했던  
청백리의 표본

백사(白沙)  
이항복



오성과 한음 일화로 유명한 이항복(1556~1618)은 참찬 벼슬을 지낸 이몽량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서 이틀이나 젖을 먹지 않았고 사흘 동안 울지 않아 점을 봤는데 “근심할 것 없습니다. 마땅히 크게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는 축하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오성은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군되어 오성 대감으로 불리게 된 별칭으로 그는 명종 11년부터 광해군 10년까지를 거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권율의 사위이기도 한 그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와 왕비, 왕자를 호위하는 일을 담당했다.

1597년 병조판서로 재임하고 사임할 때까지 5번이

나 병조판서를 지냈던 그는 마음 씀씀이가 바르고 밝아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사람을 발탁할 때 오직 그 재능의 유무만 보았으며 오로지 공론을 따랐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비난과 칭송에 대해서는 맑은 거울에 곱고 추한 모습이 한 순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태연하였다.

1617년 선조의 정비인 인목대비가 덕수궁에 유폐되고, 평민으로 만들자는 폐모론에 극렬하게 맞섰던 그는 결국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별세하였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이러한 견책을 받았으니 내가 죽거든 조복(朝服)으로 염을 하지 말고, 평소에 입던 옷과 띠를 사용하라”는 말로 근검절약의 본을 보여주었다.

나누고 베풀었던  
검소한 청백리의 상징

이항복은 어릴 때부터 재물에 욕심이 없었다. 어린 시절 하루는 새 옷을 입고 밖을 나갔다가 아이들이 그 옷을 부러워하자 옷을 다 벗어주고 돌아왔으며, 신고 나간 신발을 벗어주고 맨발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승을 지내는 동안에도 집안에는 저축한 쌀 한 섬이 없었고, 거처하는 집도 겨우 비바람을 피할 정도로 험고 누추했다.

이웃에 평소 이항복을 스승으로 섬기던 한 관리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영남 안찰사로 있던 그가 하루는 이항복을 찾아와 “대감께서 사시는 집이 너무 초라하니 다른 곳에 새 집을 짓게 되면 제가 그 값을 모두 치르겠습니다”라고 제의하자 이항복은 “지금 자네가 백주에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나에게 주겠다는 말인가” 하고 웃었다고 한다.

율곡과 광해군도 알아본  
충신이자 명신

율곡 이이와의 일화도 구전된다. 율곡이 세상을 떠

나기 전 이항복에게 ‘슬프지 않은 울음에는 고춧가루를 싣 수건이 좋으니’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 당시 이항복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러 가게 된 이항복이 불현듯 그때의 말을 떠올리게 되면서 고춧가루를 싣 수건으로 눈을 비빈 후 눈물을 흘리자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이런 충신이 있구나” 하고 감동해 원병에 나서게 됐다는 이야기다.

선조 때의 명신이자 청백리였던 이항복은 광해군도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광해군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면서 유배의 길에 오르게 된 그가 당시 철령이라는 고개를 넘으면서 지었던 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대궐에서 연회에 참석 중이던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독한 심정과 충정을 다한 애절함에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화산서원은 이항복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1631년 포천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창건하였으며,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헐어 폐지되었던 것을 1971년에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항복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인덕전(仁德殿)과 유생들이 유숙하며 공부했던 동재, 서재가 있다.



1  
화산서원(花山書院)  
경기도 기념물 제46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이항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원으로 포천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사당을 창건하였고, 이후 ‘백사서원’이라 칭하다가 1659년에 ‘꽃피’라는 지역의 지명을 따서 ‘화산’이라는 이름을 사액받았다.

2  
이항복 신도비와 사당  
이항복 신도비는 중국 황제가 선물한 운석에 영의정을 지낸 상촌 신홍이 글을 짓고 문묘에 배향되어 당대 최고 학자로 칭송받는 신독재 감집이 글씨를 쓰고, 우의정으로 병자호란 때 강화도 함락에서 순절한 충신 선원 김상응이 전서해 1652년에 세워졌다. 오른쪽으로 사당이 보인다.

3  
이항복선생묘  
경기도 기념물 제24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이항복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구하려고 끝까지 노력하였으며, 인목대비 폐비 사건에 반대하다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권율의 딸인 부인 권씨와 쌍분을 이루고 있으며 신도비와 사당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찬바람 쌩쌩 불면 떨어지는 면역력 대상포진 주의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가량 떨어질 정도로 추위에 약하다.  
그만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대표적인 면역성 질환인 대상포진의 경우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므로 평소 면역력이 약하다면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01 대상포진이란?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환자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부 발진과 수포를 동반하고 심하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으며, 발진 및 발생 부위에 따라 안면마비, 실명 등의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악성종양, 면역결핍질환, 노화 등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취업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층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 02 대상포진의 증상

발열과 오한 등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착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집중되고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 지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통 2~3주 정도 물집이 지속되다가 터져서 부스럼이나 딱지가 되면서 증상이 완화되지만 피부 상처가 나은 후에도 물집이 발생한 자리를 따라 길게는 수년 동안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참기 힘든 통증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대상포진이므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대상포진이 얼굴에 발생할 경우 안면 신경마비나 시력 손상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03 빠른 치료와 예방 중요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만큼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3일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빠른 처방으로 감염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대상포진 환자는 71만 여명에 이르며, 매년 3.4%씩 증가한다고 한다. 고령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젊은층보다 통증 발병이나 합병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과거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대상포진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리 예방접종을 하면 50~60% 정도 발병을 막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무료접종을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나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예방접종 비용이 다소 비싼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 고령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 04 건강한 습관으로 면역력 키우세요!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질병인 만큼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물론 평소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외출 시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착용해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궁금했지만 잘 몰랐던 전기차, 어떤 혜택이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 걱정 NO~ 소음 적고 승차감도 좋은데 휘발유  
비용의 1/10, 경유 비용의 1/7 수준으로 연료비까지 저렴하다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혹시 그동안 구매를 망설였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구매해도 좋을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라.

전기차 보급대수 5만대 시대가  
멀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점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전기차 5만대 시대, 관련 인프라 확대된다

전기차 보급대수 5만대 시대가 멀지 않았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  
후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간 전기차 보급대수는 2만 6,375대로 2011  
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누적 보급대수 2  
만 593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점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에 발맞춰 우체국, 공  
공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전  
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된다.  
2018년 연말까지 1,866기의 공공 급속충전  
기 구축할 계획으로 이는 공공 급속충전  
기 설치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7년간 설치된 총 933대에서 200% 증  
가된 물량이며, 기존 50kW급이던 충전기는  
고용량 급속충전기인 100kW급으로 점차적  
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이용률이 높은 충전  
소에는 다수의 충전기를 설치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올해 2만  
대에서 내년 3만  
3,000대로 확대된다.  
개별구매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축소될  
예정이지만 보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더 편하게 충전하세요!

전기차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충  
전기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  
다. 충전기 점검 횟수를 기존 월 0.45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전기차 서포터즈를 운영하  
는 등 전기차 이용자와 협업체 고장, 불편  
사항의 상시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고장률  
이 높은 구형충전기는 신형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신형충전기를 추가 설치해 충전  
환경도 개선된다.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2018년 10  
월부터는 한 장의 회원카드로 환경부 및 8  
개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신용카드만 가능했던 충  
전요금 결제는 2019년 1월부터 민간 포인트  
사·카드사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이 바뀐다. 아울러 2018년 10월부터는  
주요 포털의 지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충전  
기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정부 및 지자체별 보조금 혜택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년 정부 예산안  
에 따르면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올해 2만대에서 내년 3만 3,000대로 확대된  
다. 개별구매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200  
만원인 2018년보다 300만원가량 축소될  
예정이지만 보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  
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나뉜다. 차  
종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  
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8년 현재  
440~1,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  
다. 다만, 지원가능대수 및 지원예산이 한  
정적이고, 2019년 보조금 지원규모는 아직  
발표 전이므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  
다면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정보를 꼼꼼  
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 <참고 : 2018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단위 : 만원, 승용기준

| 시도      | 2017년 지원단가 | 2018년 지원단가 |
|---------|------------|------------|
| 서울특별시   | 550        | 500        |
| 부산광역시   | 500        | 500        |
| 대구광역시   | 600        | 600        |
| 인천광역시   | 500        | 600        |
| 광주광역시   | 700        | 700        |
| 대전광역시   | 500        | 700        |
| 울산광역시   | 500        | 500        |
| 세종특별자치시 | 700        | 700        |
| 경기도     | 500        | 500        |
| 강원도     | 640        | 640        |
| 충청북도    | 800~1,000  | 800~1,000  |
| 충청남도    | 800~1,000  | 800~1,000  |
| 전라북도    | 600        | 600        |
| 전라남도    | 440~880    | 440~1,100  |
| 경상북도    | 600~850    | 600~1,000  |
| 경상남도    | 300~600    | 600~900    |
| 제주특별자치도 | 600        | 600        |

## 독자마당



2018년 가을호에 대한  
독자 의견입니다

01

모든 기사들이 한결같이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특히 '공익제보 그 후 6년' 기사를 가장 관심 깊게 보았는데요. 거대 기업의 불합리에 맞서 공익제보를 한 주인공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사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 위의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당당하게 두려워말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민(경기도 의정부시)



02

지금까지 청렴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렴이란 말을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동참함으로써 성숙한 청렴문화가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 사회 전반으로 더 멀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장우익(강원도 동해시)



03

37년간 사립재단에서 몸담은 사람으로서 기간제 교원 채용에서 금품 요구나 쪼개기 계약 등의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선진국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렴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최영수(대구광역시 수성구)



04

'바이킹 후예의 청렴비결은?'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국가 전반에 반부패 의식이 깔려 있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나의 청렴과 청렴이 나와 나의 가족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바로 반부패 의식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더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전혜향(대전광역시 서구)



05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가 신설돼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 고맙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한 분들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신문고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김건성(경상남도 창원시)



## 권익위 열독왕

QUIZ?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부는 공공기관의 0000를 근절하고자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2019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힌트 11p)

지난호 정답 부패·공익신고

정답자 : 전영조(전라북도 군산시) 강태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태완(서울특별시 용산구)  
심동석(충청북도 영동군) 이종현(경기도 성남시)

퀴즈 당첨자 다섯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상품문의는 소식지 제작사 **더에이치(031-247-5141)**로 문의해 주세요. (2018년 당첨자만 해당)

# 소공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